

# 민주, 현직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포함 김홍일 탄핵 무산...‘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키로 전진숙·김윤 등 ‘공공보건의료법’ 제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김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뿔겨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검사 추가 탄

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탄핵 절차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오전 사퇴하면서 탄핵안 본회의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측에서는 ‘당사



더불어민주당 김윤(왼쪽부터)·민형배·정경태·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방송위 2인 체제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탄핵안

이 발의되자 도주하는 식으로 그만뒀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며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탄핵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김윤·서미화 의원 등 7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 추경 요건 합리화·무분별 부자감세 제한

### 안도걸, ‘나라살림바로잡는법’ 대표발의...적극 재정 역할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일 “추경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올해처럼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5조원 규모의 내수 진작 추경을 편성했을 때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지만 2008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과 내수 간 경기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제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제 감면율이 15.8%로 상승해 법정 한도(14.3%)를 크게 초과했다.

올해도 국제 감면율은 16.3%로 더 올라 법정 한도(14.6%)를 2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조세 감면을 크게 늘렸다. 역대급 세수 핑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감면율 법정 한도가 현재 권고 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국제 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꿔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 감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양부남 “국립인데 왜 지자체가 책임지나”

###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동시 개관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센터 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개관한 치유센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여운사건, 부마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예산·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치유센터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론·원리상 입법 취지에 비쳤을 때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아 전액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 김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사진)은 2일 “응급실 내 주취폭력 예방 및 응급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범위에 보안 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응급실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게

핵심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



하도록 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 시설의 장이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지키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공공 의료로 국가가 두텁게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